

| 김 영 훈 |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연세대학교 졸업(행정학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석사)

환경부 법무담당관, 유해물질과장, 자원재활용과장, 물환경정책과장 역임

tel. 02-2110-6670 | hoonky@me.go.kr

2011년
하반기 주요환경정책
추진방향

환경부는 2011년에 녹색강국 대한민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견인, 사람·환경·시장의 조화 등 3대 전략과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Top 환경기술 개발 등 12개 정책과제를 역점 추진하고 있다.

금년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을 공유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생활공감 환경정책을 강화하면서 서민과 환경 취약지역을 배려하는 친서민 환경정책을 확대하여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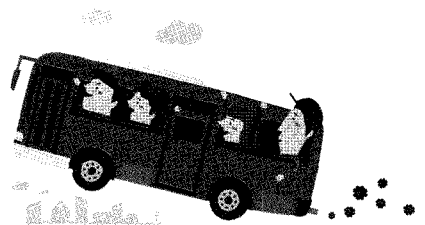


|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효율적 감축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9위로(IEA, 2006년 기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산업구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는 2009년도에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산업, 교통, 가정·상업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먼저, 산업부문에서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 시행하여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 471개 기업장에 첫 관리목표를 할당하고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산업계와 소통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교통부문에서는 2011년까지 저탄소·친환경자동차인 전기차를 800대 보급한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전기차 주행성능, 충전효율 평가 등의 실증사업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공공부문 중심으로 전기차 구입과 충전기 설치를 지원하여 판로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상업부문에서는 2008년 10월부터 발족한 그린스타트 네트 워크를 중심으로 대국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내실 있게 확산해 나가는 한편, 2011년까지 부문별·지역별로 그린리더 2만명을 양성한다. 또한, 녹색생활과 소비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는 그린카드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기존 탄소 포인트제(전기·가스·수도 절약)와 대중교통 이용, 녹색제품 구입 등 다양한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통합 인센티브 제도로 최대 연간 약 20만원 이상의 포인트가 제공되며 앞으로 적립된 포인트의 일부를 환경보호 등에 기부도 가능하게 된다.

기후변화 적응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2010년 10월에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총괄하였다. 금년도에는 건강, 재해·재난, 물 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가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실행전략을 수립한다. 또한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예측 능력 제고의 일환으로 한반도 및 인근 지역의 기후변화 유발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구환경위성 개발, 제주권 등 5개 권역 지상 집중관측소 설치도 추진한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장래 물 부족(2016년 10억 m³), 매년 약 4조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 등에 대비하기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4대강 '좋은 물(2급수)' 비율 86% 달성을 위하여 2011년까지 수질·수생태 개선 사업의 79.4%를 완공하게 된다. 또한, 수질오염 예방 제 실시, 예방적 수질관리를 위한 가동보 운영방안 마련 등 과학적 수질관리 시스템도 구축해 나가는 한편, 4대강 특성에 따른 체험형 생태프로그램 운영, 방과 후 강 체험교실·한가람 탐사대 등 참여형 친수문화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1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환경기술의 체계적 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로 연계·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법률적 기반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2010년 종료된 차세대 사업 후속으로 Eco-Innovation 기술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우선, 기술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하·폐수 고도처리 기술,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 기술, 친환경자동차 기술 등 수출 유망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4대 글로벌 탑 기술개발사업단을 본격 운영한다. 또한, 글로벌 무역·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환경기술 발전상을 예측·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유망 녹색기술포럼 운영, 기술녹색도 평가 및 활용, 미래 환경기술 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는 등 R&D 상시기획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 R&D 로드맵도 수립할 예정이다.

지난 4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개정되어 환경산업 육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기술력·성장잠재력 등이 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여 5년간 다른 업체에 우선하여 해외 시장 진출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실증화(Test Bed)와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해 환경산업체 및 지원 시설을 집적화하는 환경산업 진흥단지도 조성한다. 수도권에는 실증화 시설은 물론 시제품까지 제작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지자체는 특화된 환경기술을 실증화 하는 지원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국제적으로는 환경산업 시장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것인 전망에 따라 환경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도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환경산업 해외진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개도국 환경개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등을 수립, 현지 유망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하여 기업들의 현지 수주지원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해 해외환경협력 센터(Branch Office)도 확대·운영된다.

1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 강화

체감 환경개선으로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공감 환경정책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가전제품, 휴대용 음향기기 등 생활소음·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인공조명·악취 등 도시 생활환경 4대 요소에 대한 특별 관리로 삶의 질 선진화를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내 환경보건 실태 점검·개선서비스, 중고가구의 저소득층 무상지원 등 친서민 환경대책도 확대한다. 또한, 금년부터 시행된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조기정착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등 노후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도 지원해 나간다.

한편,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자연자원의 현명한 활용 모델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

할 계획이다. 국민의 쉼터인 국립공원별로 핵심자원, 현장을여건을 반영하여 대표브랜드를 개발하고 가족단위 탐방휴양시설 조성, 노약자 등을 위한 저지대 탐방 돌래길 등을 개발하여 탐방문화의 다양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국내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법·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고유 생물자원의 조사·발굴, 한반도 생물지도 및 생물도감 발간, 국가 생물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Ⅰ 상하수도 및 자원순환 관리 효율화 Ⅰ

상하수도 분야에서는 지방 상수도의 통합·위탁운영을 통해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 기반을 다진다. 우선 지자체를 묶어 권역을 설정하고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여 2011년 까지 5개의 통합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공기업 - 민간기업간 컨소시엄 구성 MOU 체결도 추진한다. 그 외에도, 하수도사업 운영통합 및 민간위탁, 재이용의무 확대, 공업용수 민간 투자사업 시행 등 물 재이용 활성화 대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전자제품·자동차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및 재활용률 제고, 수거·재활용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전자제품·자동차 강국에 걸맞은 자원순환성 확보와 재활용 확대를 도모한다. 또한, 폐자원 물류체계 개선과 시설 집적화를 위해 국가 폐자원 순환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도 권역별 환경에너지 타운, RDF 제조, 바이오가스화 등 자원화 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기타 언급하지 않은 정책분야에 대해서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2011년을 맘 흘리는 해로 삼아 열과 성을 다하여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환경정책을 내실 있게 성과를 도출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